

1.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된 청구권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존재 한다는 추정력이 인정 된다. ()
2. 이전등기의 현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전등기명의인에 대해서까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
3. 채무자 甲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丙이 토지소유권을 甲으로부터 양도받으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4. 점유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5. 점유보조자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점유보호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6. 소유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
7. 간접점유의 방식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 ()
8.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없다. ()
9.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부동산 전부를 자주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0.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11.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1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13.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
14.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 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15. 선의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현존이익의 배상을 하면 된다. ()

16. 악의의 점유자도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가진다. ()
17.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일체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18.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매일정리노트(O, X) 정답

1. (X)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X)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게도 인정된다
3. (X) 후순위자가 없으므로 소멸한다
4. (X)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X)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보호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6. (X)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7. (O)
8. (X)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으며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9. (X) 다른 공유자의 지분범위에서는 타주점유이다
10. (X) 상당부분을 점유한 경우는 타주점유이고, 착오로 일부를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이다
11. (X)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12. (X)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13. (O)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14. (X) 악의의 점유자라도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며,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대가보상책임이 인정된다
15. (X) 선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의 배상이며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는 손해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16. (O)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17. (X)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며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18. (X)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